

12代 總選과 環境保全



朴 昌 根
(社)環境教育會委員長

1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지난 12일 치루어졌다.

지구역 184명과 전국구 92명등 총 276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지난 1월 23일 공고된후 각 정당과 후보들은 2월 11일 자정까지 20일 동안 합동 연설회와 당원 단합대회 등을 통해 득표운동을 폈다.

총 439명의 후보가 출마, 2·4대 1의 경쟁률을 보인 이번 선거의 유권자는 전체 인구의 59·4%인 2천3백98만7천5백30명으로 11대 보다 289만명이 늘어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投票率도 84·6%로 5·16이후 최고의 投票率이었다고 한다.

선거 결과는 民正 87명, 新民 50명, 民韓 26명, 國民 15명, 新社 1명, 新民主 1명 그리고 무소속 4명 등으로 당선되었다.

이번 총선의 최대 변수는 3차 해금자 중심으로 선거일 불과 20여 일전에 창당한 新韓民主黨이 예상을 뒤엎고 서울, 釜山, 大邱, 仁川, 光州 등 大都市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 그동안의 第1野黨이었던 民韓黨을 제치고 일약 第1野黨으로 부각된 것이다.

이를 두고, 新韓民主黨에서는 “民主化를 염원하는 온 국민의 승리”라고 주장했지만, 국민들은 安定속의 民主化를 원하지 不安속의 民主化를 원하는것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국민의 염원인 民主化를 반드시 쟁취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을 다짐”하는 극한적인 혼란은 피해야 할 것이다.

하여간, 12대 총선은 끝났다. 이런 저런 말도 있지만 오늘의 결과는 먼 훗날 우리 앞에 나타나리라...

1.

선거에는 크건, 작건 公約이 따른다. 즉, 우리 당을 지지해 주면 나를 국회에 보내 주면,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는 약속이다.

즉, 公約은 선거의 商品이다. 따라서 그 商品은 무엇 보다도 質이 좋아야 하고, 값이 싸야 하며, 충분한 After Service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質은 좋지만 값이 비싸, 국민의 出血을 강요하는 것이면 안되고, 당장은 質과 값이 적당하지만 After Service가 따르지 않는 商品 이어서도 안된다.

더구나 그 商品 (公約) 이 즉흥적이거나, 선심적이며, 한 술 더 떠서 實現不可能한 商品의 나열이었다면, 이는 公約이 아닌 空約이므로 商道義로 친다면, 사기행위라고 밖에는 할 수 없다.

때문에 우리 국민은 그동안 각 정당과 후보들이 제시한 公約들을 선거 前보다 선거 後인 지금 더욱 주시해 보게 되는 것이다.

이번 12대 총선을 위해 각 정당들은 많은 公約을 제시했다. 그 중에서 굵직한 4개 정당의 선거 公約을 분명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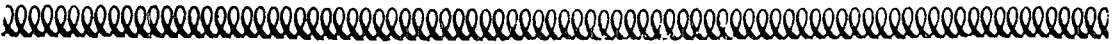
① 여당인 民正黨은 다음과 같은 公約을 제시했다.

- | | |
|---------------------------------------|----------------|
| 1. 대통령단임 평화적정권교체 | 18. 중소기업육성 |
| 2. 현間選制헌법고수 | 19. 지방경제활성화 |
| 3. '87년부터 地自制 | 20. 농어민후계자양성 |
| 4. 교육자치제시행 | 21. 대체에너지개발 |
| 5. 행정절차간소화 | 22. 투기불로소득근절 |
| 6. 언론자유신장 | 23. 접도구역건설억제완화 |
| 7. 법령체계정비 | 24. 교육개혁위설치 |
| 8. 안보의교강화 | 25. 환경오염방지 |
| 9. 南北대화전개 | 26. 복지연금, 의보확대 |
| 10. 해외동포보호 | 27. 공무원정년연장 |
| 11. 전쟁억지력강화 | 28. 사립학교세제지원 |
| 12. 南北韓대표부설치 | 29. 京釜간초고속전철 |
| 13. 국산무기개발 | 30. 임금격차완화 |
| 14. '88년까지 국민소득 2천 8백달러, 수출 450억달러 달성 | 31. 형사보상법완화 |
| 15. 농지세대폭경감 | 32. 첨단기술산업단지조성 |
| 16. 물가안정 | 33. 사회·체육시설 확대 |
| 17. 근로소득세경감 | 34. 민족문화육성 |
| | 35. 市郡에 공공도서관 |

이중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公約의 실천을 주시할 것이다.

- 3 : '87년부터 地自制 실시
- 4 : 교육 자치제 시행
- 6 : 언론 자유 신장
- 11: 전쟁 억지력 강화





- 14: '88년까지 국민소득 2천 8백 달러, 수출 450억 달러 달성
- 16: 물가 안정
- 21: 대체 에너지 개발
- 25: 환경 오염 방지

특히, 환경 오염 방지의 경우 그동안의 미온적인 자세에서, 얼마나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지를 예의 주시할 것이다.

② 民韓黨은 다음과 같은 公約을 제시했다.

- | | |
|------------------|----------------|
| 1. 대통령 직선·소선거구 | 19. 중소기업진흥 |
| 2. 선거권연령 18세로 | 20. 지방경제육성 |
| 3. 국정감사권부활 | 21. 추·하곡가 국회동의 |
| 4. 교육자치제부활 | 22. 농수축협자율화 |
| 5. 전면解禁실시 | 23. 言基法, 集示法개정 |
| 6. 경찰 및 공무원중립 | 24. 학생자치활동보장 |
| 7. 地自단체장직선 | 25. 노동 3권보장 |
| 8. 남북통일기구설치 | 26. 공직자재산공개 |
| 9. 남북교류강화 | 27. 전국민의료보험실시 |
| 10. 軍의정치적중립 | 28. 稅外부담금근절 |
| 11. 軍복무 24개월로 단축 | 29. 離農방지대책강구 |
| 12. 예비군·민방위개선 | 30. 인구증가억제 |
| 13. 재벌위주경제수술 | 31. 노인복지향상 |
| 14. 외채의존경제종식 | 32. 여성권익신장 |
| 15. 세제전면개선 | 33. 저술·창작자유 보장 |
| 16. 富裕稅신설 | 34. 환경보전적극추진 |
| 17. 농어촌부채탕감 | 35. 都農격차해소 |
| 18. 중산층확대, 失業보험 | 36. 지방·전통·문화진작 |

이중에서도 우리는 다음과 같은 公約의 실천(?)을 주시할 것이다.

- | | |
|-------------------|-------------------|
| 1 : 대통령 직선, 소 선거구 | 16: 부유세 신설 |
| 3 : 국정 감사권 부활 | 25: 노동 3권 보장 |
| 4 : 교육 자치제 부활 | 27: 전 국민 의료 보험 실시 |
| 10: 군의 정치적 중립 | 30: 인구 증가 억제 |
| 13: 재벌 위주 경제 수술 | 34: 환경 보전 적극 추진 |
| 14: 외채 의존 경제 종식 | |

시원한(?) 公約이다. 그러나 제 1 公約의 대통령 직선, 소 선거구 나 14 公約의 외채의존경제종식 , 27 公約의 전 국민 의료 보험 실



시 등은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公約일 것 같아 ××하다.

③ 國民黨은 다음과 같은 公約을 제시했다.

- | | |
|---------------|-------------------|
| 1. 대통령직선제 | 16. 중소기업육성 |
| 2. 地自단체장직선 | 17. 지방경제육성 |
| 3. 언론통폐합철폐 | 18. 민간주도경제 |
| 4. 文民정치실현 | 19. 노동3권보장 |
| 5. 국정감사권부활 | 20. 임금보장법제정 |
| 6. 간소한정부구현 | 21. 실업보험제추진 |
| 7. 군복무기간단축 | 22. 노부모부양특혜 |
| 8. 민방위운영개선 | 23. 노인사회보호 |
| 9. 전경남용억제 | 24. 여성차별철폐 |
| 10. 양곡수매 국회동의 | 25. 대입개선 |
| 11. 수매가예시제실시 | 26. 대학자치보장 |
| 12. 농어업재해보상 | 27. 교복·두발자유화폐지 |
| 13. 농어민 의료보험 | 28. 서민의료보장 |
| 14. 농수축협 자주화 | 29. 컬러TV시청료징수제도개선 |
| 15. 농어촌 병역특혜 | |

이중에서도 우리는 다음과 같은 公約의 실천(?)을 주시할 것이다.

- 3 : 언론 통폐합 철폐
- 10: 양곡 수매 국회 동의
- 22: 노부모 부양 특혜
- 25: 대입 개선
- 27: 교복·두발 자유화 폐지
- 29: 컬러 TV 시청료 징수 제도 개선

④ 第一野黨으로 부상한 新民黨은 다음과 같은 公約을 제시했다.

- | | |
|--------------|----------------|
| 1. 대통령직선제 | 11. 집 단안보체제강화 |
| 2. 국정감사권부활 | 12. 韓美안보체제재정립 |
| 3. 지자제전면즉각실시 | 13. 특혜금융지양 |
| 4. 언론통폐합철폐 | 14. 중소기업보호육성 |
| 5. 언론기관창설보장 | 15. 농어촌적자해소 |
| 6. 민營방송부활 | 16. 농어촌소독증대 |
| 7. 정치규제법폐지 | 17. 중산층집중형성 |
| 8. 전투경찰폐지 | 18. 농산물가격안정 |
| 9. 정보기관통폐합 | 19. 첨단산업개발 |
| 10. 軍장비초현대화 | 20. 이념초월한 국제교역 |



- | | |
|--------------|-----------------|
| 21. 근로자담세경감 | 27. 集示法개폐 |
| 22. 노동 3 권보장 | 28. 産學협동강화 |
| 23. 근로자권익신장 | 29. 실업교육강화 |
| 24. 학원자율화 | 30. 복지기금확충 |
| 25. 학제개혁 | 31. 최저임금제 |
| 26. 여성지위향상 | 32. 범국민윤리도덕관념함양 |

이중에서도 우리는 다음과 같은 公約의 실천(?)을 주시할 것이다.

- 6 : 민영 방송 부활
- 10: 군 장비 초 현대화
- 13: 특혜 금융 지양
- 25: 학제 개혁

각당의 선거 공약은 한마디로 국가 발전과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한 제시다. 그러나 이러한 공약이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과 개발이 뒤 따른다. 그래서 ...

큰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公約중에서 여당인 民正黨의 경우는 마음만 먹으면(?) 公約이 이루어 질수 있겠지만 野黨의 경우는 是是非非로 끝나지 않을런지?

이번 선거 公約에서 環境保全에 대한 의지는 民正黨과 民韓黨 만이 제시하고 있지, 國民黨이나 新民黨은 거론조차도 하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입후보자 대부분도 環境保全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왜? 環境保全은 눈에 보이지 않는 希望이라고 착각해서인가?

2.

각 정당의 公約은 대체적으로 國家 및 社會發展과 국민 복지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후보자 개인의 公約은 다분히 地域區 발전에 비중을 두고 있어, 國政 참여인지? 市政 참여인지? 아리송한 경우가 많았다.

즉, 國家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公約 보다, 洞內에 다리를 놓고, 길을 닦는 등 市長이나 구청장, 동장이 할 일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 國會議員을 뽑는 것인지 市長이나 구청장을 뽑는 것인지 착각하게 하는 후보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무슨 애국자가 그리도 많은지? 그동안 두, 세번씩 국회의원 출마에 낙선했다가 이번에 당선했다느니?... 國會議員되는 것 그 자체가 愛國이나 愛族이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



었다.

그렇게 國家를 위하고 國民을 위한다면 애써 꼭 國會議員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서울 J區의 H후보는 남편도 자식도 없음을 전제해 놓고, 갖고 있는 재산 60 억원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 쓸 수 있도록 당선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웃겨도 한참 웃기는 얘기다. 그돈으로 얼마든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좋은 일을 할 수 있을텐데 ... 꼭 國會議員이 되어야만 할 수 있다니 ...

뿐만 아니라 S區의 Y후보는 그동안 이나라의 環境을 이정도로나도 간신히 유지시켜준 Green belt를 해제시켜 집을 짓게 하겠다는니 ... 그야말로 질서의 원칙 부터 파괴하면서 國會議員이 되어야 하겠다는니..... 아연할 수 밖에 없다. 國會議員은 결코 權力이나, 目的의 일 수는 없다. 더더구나 人生의 成功일 수는 더욱 없다. 그러나 이번 12代 총선에서 보여준 많은 사실들은 國會議員을 마치 愛國愛族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착각한 경우를 보여 주어 서글퍼진다.

“내가 아니면 안된다” “國會議員이 되어야 愛國愛族할 수 있다.”는 따위의 한국적 國會議員像이 사라져야만 이나라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國會議員은 國民의 머슴이며, 民意의 대변자일 뿐이다. 이 사실을 12代 國會議員 諸氏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3.

이번 12代 총선에서 어느 누구도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안전한 토양」을 외친 사람은 없다.

이 現實을 나는 개탄하는 것이다.

무조건 成長과 開發만이 잘 사는 길이라고 착각하는 오늘의 현실을 우리는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것인가? 왜 이번 총선에서 環境人은 한 사람도 出馬하지 못했는가?

環境人 모두가 반성하고, 각성해야 할 사실이다. 말로는 環境保全 운운하면서 이 중요한 時期(환경의 惡化時代)에 行動으로 나설 수 있는 용기가 우리 環境人에게는 없었던 말인가?

이제, 環境問題는 실험실의 관심사나 大學講義의 제목이 아니다. 環境問題는 작게는 個人的 生存과 國家保護의 문제며, 크게는 國家發展과 人類 구제의 문제다.

따라서 環境人의 國政 참여가 當爲的 현실이 된 것이다.

5年前, 나는 「環境保護黨」의 創黨을 기획한 적이 있었다.



왜냐하면, 오늘 날의 環境 상태가 결코, 실험이나 강의로 해결될 수 있는 安易한 현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世界的 현실과 時代의 현실이 「環境黨」의 출범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외면할 수 없고, 외면해서도 안되기 때문이다.

이번 12代 총선의 결과로 보아 앞으로의 정국은 결코 순탄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각종 公約의 이행을 위해 成長과 開發 위주의 정책이 더욱 강요당 할 것이다. 따라서, 環境의 質은 더욱 복잡하게 惡化할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우리 環境은 어떻게 될 것인가? 불을 보듯 뻔한 현실이 다가올 것이 아닌가?

따라서 나는 이 시점에서 國家保護와 國民保護를 위해 〈環境保護黨〉의 創黨을 제안하는 것이다. 우선 政黨 등록을 위한 基金 조성을 마련할 수 있도록 環境人의 團結을 호소한다.

그리하여 4年후인 13代 총선에서는 環境人이 國政에 참여하여, 당장 눈 앞에 보이는 利益만을 추구하는 지나친 成長과 開發을 억제하여, 진정한 國家發展과 國民福祉 향상을 위해 적극 努力하는 環境人의 의식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뜻에 同感하는 環境人의 참여와 연락을 바란다.

11代 총선을 목표로 애써 보았지만, 우선 政黨을 위한 기탁금이라는 돈의 벽에 좌초하고 말았다. 후에 경향신문 논설위원이신 박노경씨에게 「環境黨」의 꿈을 이야기 하자, 무척 아쉬워 하셨다. “국민 계몽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것이었는데 ...”

월선 후, 故 崔潤根 사장과 다시 環境黨 이야기가 거론 되었다. 우선 친목 단체로라도 發起하자는 뜻이 모아져, 趙日成씨 등과 몇몇이 그 시작을 출발했지만, 혹시나 反政府的 인상을 줄까 보아서 (環境保全 우선 政策은 成長과 開發을 反對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韓國 현실의 벽) 적극적인 모임이 못되었다.

그러나 이제 사정이 다르다. 비록 일시적으로 成長과 開發을 반대하는 듯한 오해를 받더라도 〈環境黨〉의 出發은 이루어져야 한다. *



민속의 날 건전표어

1. 고유명절 민속의 날 어른공경 이웃사랑
2. 체면치레 명절인사 하는부담 받는부담
3. 민속의 날 우리명절 검소하고 조용하게